

보도자료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보건복지 이슈애포커스 제470호 발간 - 영유아 인구 감소와 보육 공백: 생활권 기반 필수보육시설 지원 방안		
상세문의	재정통계연구실	최혜진 연구위원	☎044-287-8312
	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	권성희 전문원	☎044-287-8282
배포부서	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장	김상욱	☎044-287-8234
	미디어홍보팀	이혜선 책임행정원	☎044-287-8345
분 량	총 3매(표 1종 포함)		
배포일시	2026년 7월 21일(화)		
보도일시	즉시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 공백, 아동의 보육서비스 접근권 문제로 다뤄야

- 영유아 인구 감소로 시설 폐원 늘어나 생활권 내 돌봄 거점 상실 등 보육공백 현실화돼
- 장거리 통원과 높은 비용 부담을 겪는 부모, 운영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시설 운영자…기존의 시설 공급 확대 중심 정책 벗어나 보육 접근권* 제도화 필요
- 공간 정보 분석으로 산출한 '접근성 취약지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맞춤형된 재정 지원 체계 마련해야

* 보육 접근권: 아동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보육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 “지역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이 글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애포커스』 제470호 <영유아 인구 감소와 보육 공백: 생활권 기반 필수보육시설 지원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재정통계연구실 최혜진 연구위원이다.

□ 최혜진 연구위원은 “영유아 인구의 전반적 감소와 함께 거주 공간의 밀집도가 낮아지는 ‘공간적 수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보육서비스 접근성은 단순한 수요·공급의 조정 문제를 넘어, 아동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필

수적인 돌봄을 누려야 하는 ‘생활권 기반의 권리’ 관점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영유아 인구 감소와 보육 공백의 공간적 양상

- 전국 영유아 수(1~6세)는 2016년 약 267만 명에서 2024년 약 183만 명으로 31% 감소하였으며, 이는 영유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영유아가 1명 이상 거주하는 100m 격자별 평균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줄었다.
- 이러한 공간 축소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수도권·광역시·도 전역에 걸쳐 영유아 밀도가 떨어지는 ‘광역적 저밀화’가 두드러지는 반면, 도 지역은 외곽 격자에서 영유아가 사라지는 동시에 읍내·시내 등 일부 거점에 영유아 수요가 잔존하거나 집중되는 ‘수축 속 집중화’ 양상을 보인다.

□ ‘유일커버시설’ 분포 및 현장 운영 부담

- 연구는 특정 100m 격자의 영유아가 단 하나의 시설 서비스권에만 포함되어, 해당 시설 폐원 시 즉각적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유일커버시설’ 개념을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차량 5km 기준 전체 시설 중 유일커버시설은 KTDB 도로망 기준 1,245개, T map 도로망 기준 1,156개로 나타났다.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보육 공백 지역의 시설 운영자들은 통원 권역 광역화로 인한 장거리 차량 운행,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부담, 교사 채용난을 겪고 있었다. 부모들 역시 장거리 통원, 교통비 부담, 아동의 피로 누적, 선택권 약화 등 심각한 이용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 여력이 낮은 가구는 폐원 시 즉각적인 돌봄 공백에 직면하고 있다.

〈표 4〉 FGI에서 확인된 운영 부담과 이용 제약

구분	핵심 쟁점	주요 내용
시설장 인터뷰	통원권역 광역화	시설 폐원으로 한 기관이 여러 면·리 단위 수요를 담당하며 차량 운행 거리와 시간이 증가함.
	운영비·인건비 부담	원아 수 감소에도 고정비는 유지되고, 반 구성 기준 미충족 시 인건비 지원이 삭감됨.
	교사 채용난	외곽 농어촌 시설은 교사 지원자가 적고, 교사의 차량 동승·당직·잡무 부담이 증가함.
	정책 사각지대	도농 경계부는 실제 여건이 농어촌과 유사하나 행정구역상 도시로 분류되어 지원에서 제외됨.
	돌봄 공백 집중	조손·다문화·교대근무·농번기 가구 등 이주나 자차 이동이 어려운 가구가 먼저 배제됨.
학부모 인터뷰	시간·금전 비용	장거리 통원, 자차 의존, 교통비 부담, 출퇴근 동선 변경이 발생함.
	아동 피로·돌봄 단절	장시간 차량 탑승, 잦은 폐원·전원으로 아동의 피로와 적응 부담이 커짐.
	선택권 약화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기보다 도달 가능한 시설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생활권 기반 보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 첫째, 보육 접근권의 제도화이다. 영유아 거주지를 기준으로 일정 시간·거리 안에서 최소 1곳의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고, 보육 공백 발생 시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운영 방식의 유연화이다. 인구 감소 및 아동 저밀 지역에서는 시간제 보육, 소규모 분산형 보육, 교사 순회·파견형 서비스 등 다변화된 공급 모델을 도입하고, 다연령 혼합반 편성이나 1개 반 운영 등을 허용하여 제도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
- 셋째, 접근성 기반 취약지수 개발 및 활용이다. 행정구역 분류를 넘어 이동시간, 도로망 연결성, 대중교통 여건, 배후 수요 등을 종합한 접근성 취약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이슈엔포커스 제470호 원문 보기 :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76239>